

몇 가지 현안 문제와 지식인의 책무

박 영 근 / 중앙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인도의 간디는 이 세상에는
일곱 가지의 사회악이 있다고
말했다. 원칙이 없는 정치, 노
동이 없는 생산, 도덕이 없는
상업, 양심이 없는 쾌락, 특성
이 없는 교육, 인간성이 없는
과학, 희생이 없는 종교 예배
가 그 내용이다. 마치 지금
우리 사회를 적확하게 진단하
고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처
럼 보인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부딪친
몇 가지 주요 현안을 살펴보
고, 21세기를 앞두고 이 땅에
서 지식인이 나갈 행보를 곰
곰히 생각할 시점에 왔다.

1. 머리말

몇 해 전에 ‘문민정부’
는 청와대 주변의
개방, 안가의 정리, 안기부
와 기무사의 직무 조정 및
기구 축소, 중앙청의 철거,
‘하나회’에 속한 정치 군인
들의 전역, 금융·토지 실명
제의 실시, 재산 공개 등
개혁을 힘차게 해내었다.
어떤 이는 문민정부의 살맛
나는 이같은 조치들을 무혈
혁명이라고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3당 합당이라는 태
생적 한계와 개혁의 보수적
속성 때문에 ‘신한국의 창
조’가 또다른 ‘한국병’의 고

질로 되었다. 김영삼 대통
령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하지만 인사는 亡事
가 되었다. 내각, 청와대,
각종 위원회의 인선을 보고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지
적이 많은 실정이다. 개혁
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
다. 진통이 따르게 마련이
다. 오랜 부패의 두께를 건
어내어 사회를 안정시키는
길은 수술을 통한 ‘개혁’밖
에 없다. 그런데 끝내 군사
정권과 보수를 가장한 수구
세력과의 텃줄을 끊지 못했
다. 따라서 짜집기식의 개
혁 잔치는 끝났다. 개혁 프
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개혁
의 후유증은 그만큼 더 깊
었다.

교육은 어떠했는가. 교육부나 대학들은 몇 해 동안에 걸쳐 대학 개혁안을 연거푸 터뜨렸다. 그러나 교육의 질을 높여려는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는 눈을 씻고 보아도 어디에서나 찾을 수 없었다. 시장 경쟁의 논리와 경영 마인드가 판치고, 대학 정신은 아예 숨조차 쉬지 못했다. 수요자 중심이라는 미명 아래 학과의 통폐합에서 비롯한 문제의 심각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교수들은 대학이 '지식 공장'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한다.

당근과 채찍을 든 교육부가 우수대학과 대학원을 선정하고 대학 발전 기금을 많이 모금하는 대학에 '차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학은 정신을 못차렸다. 교육 개혁은 교육 재정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 의지와 교육부 및 교육관료 그리고 사학 재단을 과감하게 수술하는 데 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교육 개혁은 미봉책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꼬챙이는 타고 고기는 설익은 꼴이 되고 말았다.

최근 교육부는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은 주당 5시간을 줄이고 영어 시간은 주당 7~8시간을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세종대왕이 탄생한 지 600돌이 되는 해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다. 개방화와 세계화는 '힘의 논리'이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교육 철학 없이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기를 바란다면, 이는 마치 '카우보이 복장에 일본 칼을 차고 판소리를 어설픈 흥내내는 삼류 광대가 세계적인 배우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인도의 간디는 이 세상에는 일곱 가지의 사회악이 있다고 말했다. 원칙이 없는 정치, 노동이 없는 생산, 도덕이 없는 상업, 양심

이 없는 쾌락, 특성이 없는 교육, 인간성이 없는 과학, 희생이 없는 종교 예배가 그 내용이다. 마치 지금 우리 사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처럼 보인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부딪친 몇 가지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21세기를 앞두고 이 땅에서 지식인이 나갈 행보를 꼼꼼히 생각할 시점에 왔다.

2. 가족주의적 조기 교육의 문제점

“지능 지수(IQ)는 일자리를 보장하지만 감성 지수(EQ)는 승진을 보장한다.” 이제 우리에게도 익숙해진 말이다. 말하자면 성공의 열쇠는 총명한 두뇌보다 균형잡힌 감성과 인성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그런데 EQ 계발은 가정 교육에서 함양된다는 게 전문가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 평범한 사실을 너무나 모른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은 반도체가 큰소리 친다. 하지만 이른 시일 안에 생명 공학과 인공 지능이 하이테크의 중심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불변의 진리는 예전이나 앞으로나 교육이 무게 중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 중심의 두 축은 파괴된 인간성의 회복과 상상력 및 창의력이다. 풍부한 감성 지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가정 교육에서 얻어진다. 예전과는 달리 학교는 인간 교육보다 지식과 정보 교육에 역점을 둔다. 그러나 어느 것도 부모가 가르치는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법이다. 부모의 교육은 부모 스스로가 인식하든 못하든 간

에 일생동안 지속되며 인생의 모든 분야를 보듬어 추스른다.

‘동화연구 아버지모임’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육이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선생님이나 웃어른에게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는 55.4%이며, 인사를 잘 안 한다는 어린이는 42.3%이고, 전혀 인사를 안 한다는 어린이도 2.3%에 이르렀다. 화장실에 갈 때 노크하는 습관을 가진 어린이와 침을 뱉지 않는다는 어린이도 각각 45%밖에 안 되었다. 전철이나 버스에 노인이 탔을 때 자리를 양보하는 어린이는 22.1%가 되며, 자리 양보를 아예 할 생각이 없다는 어린이가 8.6%나 된다. 심지어 자리를 양보하기가 싫어서 자는 채하는 어린이가 5.9%에 이르렀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에서 84%의 부모가 어린이들이 보아서는 안 될 TV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얼마 전에 게재했다. 지금 미국에서 많은 도시들이 ‘청소년 통금’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웃끼리의 신뢰 회복과 공동체의 참여가 핵심 내용인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의 필요성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드세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노래방, 비디오방, 만화가게, 일본과 미국풍을 흉내낸 국적 불명의 저질 코미디와 선정적 쇼와 퇴폐적인 드라마, 음란한 내용이 내장된 컴퓨터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누구도 못 본 체한다. 악순환의 고리에 단단히 묶여 있다.

외국에서는 조기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히말라야의 영지에서 사는 티베트족은 어린이들에게 조기 교육을 시킨다. 종교

습속과 히말라야의 험한 조건 속에서 살아 내려면 강인한 정신력과 자립심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섯 살 전후만 되면 어머니 곁을 떠나서 절에 있는 학교에 보낸다. 2~3년 동안 공부를 마칠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 일본 부모들은 자식들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그것을 최고 덕목으로 친다. 프랑스의 툴라랑스(허용 오차)와 일맥 상통한다. 자식들이 집에서 응석부리는 것을 받아준다. 하지만 밖에서 남에게 폐를 끼치는 무례한 행동은 용납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일하는 어머니들을 위해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원에서도 가장 애를 쓰는 부분이 바로 생활 실천 교육이다. 생후 40일부터 만 5살까지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보는 이 곳에서는 공손하게 인사하기와 자기 물건 정리하기, 칫솔과 화장실 사용법, 식사하는 예절 등을 꼼꼼하게 가르친다. 일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바른 생활 습관과 튼튼한 체력을 바란다. 독일은 유치원 단계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조기 교육을 금지시켰다. 상류 계층의 자식들을 겨냥한 조기 교육은, 인간이 공동 생활의 출발점에서부터 ‘같은 조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출발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독일 국민들은 ‘결과의 평등’이 불가능하더라도 ‘기회의 균등’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어 왔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나라의 체제적 정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독일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확정한 이 ‘출발점 평등의 원칙’이 석기 시대의 유물이 되어 간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호강에 겨우면 성격 형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가난하지만 엄격한 집에 맡겨서 키우는 관행이 있었다. 이처럼 동서고금 할 것 없이 어머니한테 부리는 응석으로부터 ‘자립’시키는 조기 교육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속성 교육을 통해 좋은 대학에 보내고 출세시키려는 과욕에서 시작한 ‘가족주의적 조기 교육’은 문제 투성이지만 있을 뿐이다. 사교육비가 18조 원에 이르렀고 앞으로 더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가정은 점차 해체되고 있고 가정 교육은 사라졌다. 학원 조기 교육이 어린이를 죽이고 있다. 일본의 유명한 만화 작가 미야자키와는 상상력과 창의력 죽이기가 일본의 위기를 가져 왔다고 진단했다. “사람은 어른이 되더라도 마음 속에 어린이 한 명씩을 데리고 산다. 사랑할 때, 작곡할 때, 그림 그릴 때 그 어린이가 힘을 쓴다. 창조는 바로 마음 속의 어린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아름다운 호수를 보아도 느낌이 없다. 현실에 묶어놓은 상상력만으로 세상을 보려한다.” 빌 게이츠도 같은 맥락에 선다. “우리 회사의 최대 자산은 직원들의 상상력이다. 이 자산이 증식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겉핥기 식의 예체능 교육과 우리의 문화 지형과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영어 조기 교육 등 우리 식의 교육으로는 감성 지수가 높은 인간을 양성할 수 없다. 오히려 창의력과 상상력을 위축시키고 교육 현장의 탄력성을 잃게 할 뿐이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다.

여러 나라의 수상, 경제 장관, 기업총수, 국회 의원 등 1,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인사들은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부분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전략적 관심을 가지는 국가가 21세기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21세기에서 살아 남으려면 창의력과 문화 감각이 뛰어난 독창적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세계의 흐름과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접목시킬 수 있는, 균형 감각을 지닌 인재를 키우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는 출발부터 글렀다. 더 이상 어린이를 죽이고 있는 한국식의 조기 교육은 안 된다. 창의력을 갖춘 인간을 키우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가가 과감한 대책을 세우고 국민이 협조해야만 희망이 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막스 보른은 지적했다. “영악하고 유능한 학생을 갖는 것은 만족스럽다. 하지만 그들이 좀 덜 영악하고 지혜가 좀 더 많았으면 얼마나 바람직할까. 그들이 나에게 배운 것이 연구 방법뿐이었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다. 지금 그들의 영악스러움이 세계를 절망적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3. 문민정부와 문화빈곤

이미 선진국들은 21세기를 대비해서 문화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영국은 문화 분야에서 새로운 천년을 마련하는 의욕에 찬 청사진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미 몇 년 전에 ‘2천년 위원회’(The Millennium Commission)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대규모 이벤트 행사와 미래를 열어갈 대형 프로젝트와 예술·과학 인재의 양성을 지원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가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자 존 메이저 수상은 재작년

에 ‘국민복권’을 신설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 중 28%를 예술, 스포츠, 문화 유적의 관리, 밀레니엄 사업에 쏟아 붓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지난 천년을 정리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천년’을 여는 데에 더 큰 비중을 둔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현대 미술관을 개관하고 영국 전역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재경원이 마련한 문체부 관련 '97년 예산액은 총 4천 8백 20억 4백만 원으로 '96년 대비 33.8%가 늘어난 수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체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열기 전까지 한국 문화의 특성이 배어있는 문화 도시를 만들고, 2020년까지 문화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문체부의 문화 복지에 대한 기본 구상은 시행 첫 해부터 어려움에 부딪쳐서 많은 부분을 고칠 수밖에 없었다.

당초 문체부가 요구했던 문화 예산 중 재경원이 송두리째 전액을 깎은 것은 △문화거리 조성(52억 원) △한국전통문화학교 신설(44억 6천 3백만 원) △광주 비엔날레 기금 지원(50억 원) △공공박물관 건립 지원(1백 30억 원) △대중예술전문 공연장 확충(48억 3천 9백만 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40억 원) △침단 영상테마공원 건립(50억 원) △한국문화원 증설(63억 4천만 원) 등 10여 건에 이른다. 위의 항목을 꼼꼼히 들여다 보면 모두 늘려줄 만한 것들이다. 특히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40억 원에 이르면 문체의 심각성은 위험 수위를 넘어 선다. 희랍인들은 도서관을 ‘마음의 병원’이라 생각했다. 사상의 생산을 위한 분만실, 역사가 생명을 갖게 되는 장소인 도서관이 제 몫을 다하기 위해 써야 하는 돈

은 해마다 늘어간다. 올해 완공되는 대영 박물관의 건축비만도 4억 달러가 넘는다. 새로 짓는 프랑스 국립 도서관의 건축비는 10억 달러가 넘는다. 미국 국회 도서관은 직원이 5천 명이나 되고 연간 예산이 2억 5천만 달러나 된다. 문민정부가 공공도서관의 자료 구입비로 마련했던 금액은 고작 40억 원뿐이었다. 그런데 ‘체육공화국’은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 그것마저 몽땅 없앴다. OECD에 가입한 우리는 후진국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계의 흐름을 너무나 모른다.

21세기에서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문화패권주의’와 ‘문화 충돌’에서 빚어질 문제라고 진단하는 프란시스 후쿠야마와 새뮤얼 헌팅턴 같은 학자들이 많다. 우리는 과연 남·북의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문화 통일’을 대비한 문화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21세기에 세계 문화 체제에의 편입을 위한 문화 지형도를 가지고 있는가. 있기는커녕 우리 문화 인프라는 국민 소득 1만 달러 시대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박물관과 미술관과 도서관 등 국민들이 누려야 할 삶의 질을 자극하는 기본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있어도 빈약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중 하나가 미술관이다. 한 마을에 미술관 하나씩 갖기 운동을 펼치는 일본은 공립 미술관이 무려 395개나 있다. 우리는 겨우 ‘국립근대미술관’이 하나 있을 뿐이다. 문화 소인국의 몰골을 여지 없이 보여준다. 문화 기반을 늘리는 것은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수하는 기회를 폭넓게 갖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정부가 ‘문화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약속도 이 때문이 아니었는가.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말했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늦장부리지 말고 文痴를 거두어야 한다. 영국은 쪼들린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팔 길이 정책’(Arm's length policy)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문화 예술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은 하되, 팔 길이 만큼 떨어져 깊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4.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

요즈음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한 몸살이를 하고 있다. 정치는 무력화되었고, 언론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재벌 중심의 경제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일등주의와 세계화를 떠벌리고 있는 재벌주의는 사회적 다원주의가 정당화되는 약육강식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릴 특권과 특혜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화·합법화하고 있다. 한보 사태는 기형적 재벌 구조를 근본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던져 주었다. 업종을 전문화하지 않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채 재벌 총수와 족벌에 의해 움직이

며, 권력과 언론과의 유착을 통해 온갖 특혜를 누리 왔고, 전문 경영인을 마다하는 재벌 체계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국민 경제를 재벌의 손아귀에 두는 게 문제다. 재벌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국 경제에 한계가 왔다는 말이다.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이른바 ‘문민정부’로 출발한 김영삼 정권은 개혁을 내걸고 우리 사회가 지닌 고질적 부정 비리를 없애려고 했다. 하지만 3당 합당의 태생적 한계를 지닌 현 정권은, 김일성 조문 파동 이후부터 수구 세력에 단단히 발목 잡혔다. 계속된 대형 사건에 대한 현 정권의 무원칙한 대응을 보고 국민들은 현 정권이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있는가 하고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초기에 90%가 넘었던 지지도는 현재 겨우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밀어붙이기가 또 일어났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독일의 한 신문은 이것을 보고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절차는 아직도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문민정부는 자신의 이중성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심지어 문화 활동마저 위축시킬 위험을 지닌 안기부법, 그리고 사용자를 위한 노동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면 왜 경총과 전경련이 노동법을 재개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하겠는가. 화근의 뿌리는 복수 노조의 허용이 3년간 유보되고, 교원 단결권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데 있다. 결국 사용자의 이익을 감싸는 반면에 노조를 고스란히 무장해제하는 편파적인 법이었다.

특히 최근 ‘국제교원교련’의 쉬나 한리 사

무차장은 한국과 케냐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케냐는 초·중등 교사들에게 단결권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만 교원 단결권이 없다는 말이다. 교육현장은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세계화와 선진국을 외치면서도 우리는 이처럼 부끄러운 현실에 놓여 있다. 따라서 노동자,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반발을 보인 박빙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최근 여론 조사에서 65%의 국민은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날치기 통과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동의했다. 뿐만이 아니다. 노동자의 과업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8%나 되었다.

4년 전과는 달리 세계 언론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뉴욕 타임스』 작년 12월 30일 “김영삼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악명 높은 안기부법에 다시 한번 한국 국민들을 감시하도록 하는 치명적인 새 법을 서둘러 통과시킴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사설에서 주장하면서 “민주화를 약속했던 정부가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또한 르 몽드는 김 대통령의 정치 문화가 타협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고, 지난 해 말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법이 힘의 우위를 이용한 ‘권위주의’ 방식을 사용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 대통령이 오히려 안기부법을 고치는 등 ‘철권통치’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과 영국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외국 언론들의 질타가 한결같이 따갑다. 권위주의로 회귀해서 민주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게 공통된 시

각이다.

이 지점에서 통일꾼인 장준하 선생의 말이 수면에 떠오른다. “4월 혁명은 자유와 민권의 선각자인 이 땅의 지식인들의 손에 의한 혁명이다. 그러나 우리의 혁명은 아직도 그 전도가 요원하다. 마음의 혁명 없이 제도만을 바꾼들, 사상적 기초 없이 독재자만을 제거한들, 부정 속에 계속 항거하는 단결된 국민의 역량이 없다면 또 다른 형태의 독재나 또 다른 모양의 부패를 어떠한 방법으로 막겠는가? 지금 이 나라의 사태를 관찰하건대 전에는 너희가 해먹었으니 오늘은 우리가 좀 해먹을 차례라는 식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 가슴아프다.” 현 정권은 내용이 시대착오적이고 절차가 반민주적인 이법을 국가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도 다시 고쳐야 한다. 김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여론을 고려해서 용단을 내려야 한다. “민심은 곧 천심이다.” 역사는 민심에 등을 돌리고 자신을 과신했던 통치자의 말로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주었다. ‘有始의 씨앗’을 뿌렸던 김 대통령은 ‘有終의 美’를 거두어야 한다.

5. 북한의 식량 기근과 남한의 외교 빈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수해를 입었다. 썩대밭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지원이 4차 회담과 별개라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 해 8월 한국을 방문한 찰스 카트먼 국무부 부차관보는 ‘북한 끌어안기’와 ‘남한 달래기’라는 미국 입장을 견지해서 한국도 대북 지원에 동참할 것을 강

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선뜻 내키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그러나 국제기구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이 입은 수해의 심각성이 날날이 밝혀지고 있다. 당장 북한에는 약 200만 톤의 식량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나라들이 북한 돕기에 줄줄이 동참하고 있다. '피스 보트'(Peace Boat)는 보트로 여행하면서 국제 교류를 추진하는 일본의 시민 단체이다. 이 단체의 회원 250명이 60톤의 쌀과 구호품을 싣고 북한을 돕기 위해 원산항에 도착했다. 또한 지난해 미국 내 '비정부기구'(NGO)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 컨소시엄을 만들었다. 한 관계자는 북한을 지원할 컨소시엄의 명칭을 이들 단체가 소속된 150개 국제민간 구호단체 이름인 '인터액션'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균형 감각을 잃은 한국 정부는 북한에는 극우적 '외곽 대응'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구겨진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현 정권은 독도 영유권과 군대 위안부의 문제와 일본 고위 관료들의 계속된 망언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두 개의 한국 정책을 통한 '한반도 분단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김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따돌리는 것이다.

또한 수십 년간 우리 안보 환경의 기둥인 한·미 공조체제가 빠져거러다. 특히 지난해부터 동북아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진 미국 전문가들은 대북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원칙과 철학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이들은 "미국의 정책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북한에 대해 기울이는 노력에 비하면 한국

정부가 될하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고, 심지어 한반도에서 가장 골치거리인 북한이 아니라 한국 정부다"고 푸념까지 했다. 문제가 꼬이면 바람직하지 않다. 벼랑 끝에 선 한국 외교의 빈곤한 몰골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대북 지원이나 대북 유화 정책을 냉전적이고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노획한 집단들이 의외로 많다. 더 심각한 것은 대북 문제에서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에 앞서거나 양자가 뒤섞여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과거의 정치 논리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요지부동이다. 독일의 정치 평론가 테오 쾰머는 통독의 경험을 살려 우리에게 몇 가지 조언을 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언제든지 북한과 접촉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이제 삼바 싸움을 거두고 남·북도 함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북한은 개방하고, 남한은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전방위적 '거품 현상'을 가라 앉혀야 한다. 북쪽의 '맹목적 광기'와 '굶주림' 그리고 남쪽의 총체적 '부패'와 '빈부 격차'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 민족은 전잡을 수 없는 재앙에 부딪칠 게 뻔하다.

지금 우리는 전환기의 어려움을 툭툭히 겪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수구 세력의 턱없는 준동이 계속되는 한, 북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남한의 개혁은 실종되며 통일 문제는 덧나게 될 뿐이다. 언제까지나 경고 틀 것인가. 북한을 낮가림해서는 안 된다. 동포의 굶주림을 아랑곳하지 않으면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민족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특히 '국제아동기

금'이 병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의약품 공장을 다시 짓는 데 원조하기로 했던 35만 달러마저 한국 정부가 유보시켰다.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새벽을 위해서 '결코' 이래선 안 된다.

통일에 드는 비용을 지금부터 서서히 부담할 필요가 있다. 4천억 원이면 200만여 톤의 쌀을 구매해서 북한의 기근을 없앨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북한은 결코 핵폐기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오죽했으면 핵폐기물을 반입해서 인민의 기근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겠는가. 북한을 궁지에 몰아 넣어 내부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에게 위험하다. 경쟁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이 대북 정책의 중심 기조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국내 문제와 연계시켜서 좌충우돌하는 정책의 혼란은 안 된다. 북한이 왜 현 정권을 불신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생각해야 한다. 철학과 정책의 부재이다. 북한이 연착륙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는 총체적 어려움에 부딪친 북한을 도와서 '동질성의 퇴적층'을 일구어 낼 때이다. 공은 "민족이 우방보다 우선"이라고 선언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던져졌다.

6. 기적의 녹색댐과 무모한 파괴 행위

“물은 어디서 오는가. 빗물에서 주로 온다. 비가 필요 면적에 내려야 하고 그 곳에 숲이 있어 머금어 주어야 한다.” 지난해 독일 쾰른 지역 수도국에서 있었던 ‘물 관계 세미나’의 핵심적 담론이었다. 나무를 잘 가

꾸기로 정평이 난 독일은 수원지 주변과 곳곳에 있는 산지와 구릉지 일대에 가문비 나무를 많이 심어서 조성된 숲으로 유명하다. 나무를 한 그루 베는 데도 담당 공무원이 심사하고 입회해야 할 정도로 수목 관리를 하는 데 엄격하다. 쾰른 시 일대에 있는 수도국 급수지의 주위도 수원을 보전하는 지구로 지정되었다. 반경 2km 주위에서는 풀 한 포기도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

2차 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독일인들이 가장 뼈아프게 겪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산림 훼손이었다. “독일의 풍요는 숲에서 나온다”며 승전국 가운데 일부 국가가 아름드리 나무들을 베어버린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독일인들은 숲을 식수와 공기를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으로 여긴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허파’이자 ‘인간의 쉼터’인 숲을 경제적 효용성과 관계없이 녹색 공간으로 지켜왔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숲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녹색 공간이다.

따라서 세계 산림학계는 ‘삼림’을 ‘녹색댐’(green dam)으로 자리매김한다. 숲이 물을 담수(湛水)해서 내보내는 기능이 인공댐을 능가하는 점을 고려해서 붙인 이름이다. 인공댐은 수몰 지구를 만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거리로 되었다. 따라서 요즘 세계가 인공댐보다는 녹색댐에 물을 담수하고 있는 추세이다. 숲이 물을 저장하려면 숲이 많이 우거지고 건강해야 한다. 그래야만 토양층이 깊고 부드러워져서 빗물이 땅 속 깊숙히 스며들 수 있다. 독일, 스웨덴, 캐나다, 미국 등 森林相이 넓고 깊은 나라에서 아직도 많은 산림 자원을 손상하지 않고 공들여 가꾸는 것은 바로 녹색댐이 담수 능력을 지니

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흥미를 끄는 자료를 발표했다. 산림청 산하에 있는 '임업연구원'은 3년 주기로 평가하는 '산림의 공익 기능 계량화 연구'를 내놓았다. 우리나라 전체 6백 45만 2천 ha의 숲이 1년 동안 국민에 베푸는 공익 기능을 '95년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7개 분야에서 모두 34조 6천 1백 10억 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의 공익 기능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담수 기능으로 평가액이 자그마치 9조 9천 3백억 원이었다. 다음으로는 대기 정화 기능이 7조 2천 2백 80억원, 토사 유출 방지가 6조 4천억 원, 휴양 기능이 4조 4천 8백 80억 원, 정수 기능이 4조 1천 2백 30억 원이다. 산림의 중요성을 계량화한 의미있는 자료이다.

산림학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지 林相은 아직 초라하기 그지 없다. 그동안 꾸준히 녹화 사업을 한 결과, 우리나라 산들은 어느 정도 푸른 옷을 입었다. 하지만 산림의 녹색담 기능을 높이기 위해 수원 함량이 높은 상수리와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와 자작나무류 등을 조림하지 못했다. 게다가 대부분 수령이 고작 30~40년에 불과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나무 가꾸기를 과학적으로 하지 못한 탓으로 아직도 물을 깊게 저장할 수 있는 토양층을 형성하지 못했다.

우리는 현재 전 국토에 내리는 강수량의 23%만 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땅에 내리는 강수량은 연평균 1,276mm나 된다. 전 세계 강수량이 연평균 730mm인 것에 비하면 비교적 풍부하게 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 특히 농지 전용도 산림 훼손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거리로 대두되었

다. 삼림과 같이 엄청난 담수 능력을 지닌 논을 용도 변경시켜 마구 없애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시·도가 앞다투어 수익 사업을 벌임으로 해서 산림을 크게 훼손시킬 위험이 높은 개발 사업을 잇달아 발표했다. 더구나 지난해 국회의원의 입법안 의결로 말미암아 시장과 도지사는 환경 영향 평가의 협의권을 거머쥐었다. 따라서 제주개발 특별법과 폐광지역지원 특별법 그리고 덕유산과 발왕산에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그나마 남아있는 '녹색담'을 크게 훼손할 여지가 크다. 산지는 한번 파괴되면 회복하는 데 빨라야 60년에서 2백 년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다. 따라서 산림지 보전이야말로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악조건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지난해 신한국당은 그린벨트를 완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 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안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의 중·개축 범위를 60평에서 90평으로 늘려주고, 결혼 자녀를 위해 1가구씩 분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국당의 완화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최대 6억여 평까지 그린벨트가 망가질 위험이 있다는 정부의 분석 자료가 나왔다. 이는 그린벨트 전체 면적 16억 3천여만 평의 37%에 이르는 것이다. 신한국당의 완화안이 그린벨트 제도를 뿌리째 흔들 것이라는 우려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게 뻔하다. 그린벨트 제도는 2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무려 45회에 걸쳐 '선거철' 때마다 크고 작은 손질이 있었다. 선거철만 되면 그린벨트 완화를 들먹이는 정치인의

몰지각한 행동이나, 특하면 규제보다 개발이 중요하다고 선소리를 높이는 일부 언론계의 철부지 주장에는 문제점이 많다.

여당은 이 문제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산권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제기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문제는 지역 주민의 이해 관계가 아닌 국토의 합리적 관리라는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관계될 때는 제약을 두는 게 세계적 추세이다. 그린벨트 제도를 완화시켜서 재산권을 회복해 주자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토지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재산권 행사는 일정하게 묶어야 한다는 말이다. '녹색댐'과 물은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생명의 젖줄이기 때문이다.

7. 지식인의 책무

“작가의 사명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았습니다. 작가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수많은 결점과 잘못을 폭로하는 동시에, 우리 인류의 진보를 위해 어둡고 위험한 꿈을 밝은 곳으로 드러낼 의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존 스타인벡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한 말이다.

작가라는 단어를 교수 내지 지식인으로 바꾼다면, 우리의 초상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해방 이후에 몇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수들은 중요한 사회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군사정권은 남·북 분단에서 비롯한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로 지식인들을 회유·협박해 왔다. 이른바 잘 나가는(?) 교수(프랑스 작가인 폴 니장은 이런 사이비 지식인들을 지배 문화를 옹호하는 '집

지키는 개'로 불렸다.)들은 정치권으로 나가서 독재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시켜 주고 빌붙었다. 하지만 대부분 일회용품이 되고 말았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수들은 이런 일그러진 자화상에 익숙해졌고 '삶의 문제'를 거부했다.

교수들은 각자의 영역이 지닌 순수성과 객관성과 중립성을 내세워 상아탑에 칩거했다. 대학이 사회와는 아무 상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치 중립의 회색 지대에 머물렀다. '침묵의 우골탑'에 자신을 묶고 사회 참여에 거리를 두었다. 지행합일의 프락시스는 박제가 된 신화이다. 심지어 많은 지식인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평화·대동 단결을 내세웠다. 어떤 교수들은 세계주의와 보편주의를 들먹이면서 자신의 지분을 착실히 누렸다. (게리 데이비스 운동의 허구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48년 미국인 게리 데이비스(Gary Davis)는 자신이 세계 시민이라고 주장하고 세계 정부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신분증을 태웠다.) 따라서 교수들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불러 일으킨 문제점에 등을 돌렸다. 교수가 상아탑에 눌러앉아야 한다는 주문은 비스마르크나 히틀러처럼 독재자들이 즐겨쓰는 정치 구호와 맥을 같이 한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 지식인들을 정치·사회경제적 문제들로부터 떼어 놓아서 그들을 '사이비 지식인'으로 전락시켰다.

얼마 전 팔레스타인 출신인 에드워드 사이드 교수는 『권력과 지성인』이라는 책에서 말했다. “지성인은 폄박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도덕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일시적 풍조나 유행을 좇아서는 안 되고 진정한 아이디어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지성인이

아니고는 그 어디에서도 나올 수 없다. 지식과 교양은 물론이고 이성적 판단과 실천력과 포용력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20세기 위대한 철학자이자 실천가인 사르트르는 『지식인을 위한 변명』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자주 말했다. 노동자 계급은 열악한 조건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만한 전문가를 배출할 수 없다. 따라서 지식인들은 중간자적 입장을 떠나서 노동자가 역량을 제대로 갖출 때까지 민중을 위해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그의 ‘하향 탈계급론’의 밑그림이다. 따라서 전문 지식을 갖추었다고 모두 ‘지식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는 “민중 그 자체가 도덕적이며”, “민중을 외면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지식인은 단지 ‘기술자’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럼시가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자리매김한 진짜 지식인은 자신의 존재를 정비하고 지배 계급의 헤게모니를 거부해서 이 사회를 과학적으로 이해한다.

지성인이 멀리할 게 많다. 이분법적 사고, 냉소주의, 배타적 지역주의, 소극적 침묵, 변절 그리고 권력에의 유혹 등이다. 우리 지식인의 역사는 과연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웠던가. 얼마 전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날치기로 통과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식인의 자화상에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특히 냉소주의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 우리 사회를 무겁게 누르는 냉소주의자는 “모든 게 그렇고 그렇다”고 말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는 민감하지만 그 이외의 어떤 가치도 거부한다. 냉소주의자인 디오게네스에게는 따뜻한 햇볕이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독약을 마신 소크라테스에게는 진리가 문제였다. 또한 이분법적 사고를 떨쳐버려

야 한다. 물리학자 파울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이분적 사고를 “악마의 산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미셸 세르는 『기생』에서 말했다. “신인가, 악마인가? 배제인가, 통합인가? 정인가, 반인가? 대답은 스펙트럼이요, 끈이요 그리고 연속이다. 우리는 결코 예나 아니오라는 식으로 대답하지 않을 터이다. 안과 밖, 예와 아니오, 영과 1 사이에는 무한한 가치가 나타나 있고 무한한 대답이 놓여 있다.”

8. 맺는 말

‘근대화’와 ‘세계화’와 ‘정보화’의 구호 앞에서 우리는 옛부터 우리 조상들이 지녀왔던 훌륭한 덕목을 너무 빨리 포기했다. 끈기와 예의는 사라지고, 조급함과 무례가 판을 잡는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정 부패가 비등점을 이루고 있고,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우리는 두레 의식과 염치를 잃어버리고, 조급하고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 어른 정신이 고갈되었고 시대 정신이 증발했다. 지도층의 솔선 수범이 없고,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품격 유지를 찾아 보기가 어렵다. 많은 사람들은 재벌의 일등주의와 시테크의 마술 앞에서 갈피를 못 잡고 술렁대고 있다. 눈부신 경제 발전에도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 코리안 드림과 다운사이징의 허상을 실감하고 있는 셈이다. 느긋함과 여백과 절제의 푸짐함을 모른다. 공동체를 멀리하고 개인의 구원에만 매달린다. 헤겔은 그것은 ‘불행한 의식’이라고 자리매김했다. 마치 『악령』의 주인공 공 스타브로긴이 외친 “신이 숨어버린 세

계”를 보는 것 같다. 그 세계에서 인간은 무슨 짓을 하든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요즈음의 우리 모습이다.

한탕주의적 황색 저널리즘은 견제와 비판 정신을 멀리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병들게 했다. 사회 정의는 물건너 갔다. 국가와 사회 기강은 위기를 맞고 휘청거린다. 부정 비리로 뒤범벅이 된 사회 지도급을 비판·개선하는 데 교수들이 발벗고 앞장 서야 한다. 정신 오염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정신 문명을 건설해야 한다. 플라톤이 말한 ‘이상적 공화국’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낮게 생활하고 높게 생각하라”고 영국 시인 위즈워드는 말했다. 성숙한 겸손의 품을 보이고, 아는 만큼 실천했던 우리 선조의 지혜와 지조를 본받아야 한다. 검은 고리를 끊어야 하고,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키치(Kitsch) 공화국’의 불명예를

떨쳐버려야 한다. 우리 주위에 넘쳐 흐르는 모방 문화는 가짜 문화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한단지보(邯鄲之步)’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공격 문화가 아니라, 아우르는 공존의 문화를 통해 우리 모두가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인의 책무가 중요하다. 그리고 무겁다. ■

박영근/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육사 교수부 외국어과 교관, 전남대 교수를 거쳐 현재 중앙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교수신문』 편집주간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발자크의 연구』, 『고리오 영감』(역서) 등이 있고, “인간 희극에 나타난 정신과 물질의 상관 관계”, “Le Grand Meaulnes에 나타난 안정과 불안정의 의미”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